

大韓國土計劃學會를 찾아서

綜合科學的 國土計劃樹立을

自然保護와 國土開發
學會는 用役機關이 아니다

分野的 PROFESSIONAL 理念追求

노용희 회장(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長)

——대한국토계획학회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하시는 곳인지요?

학회의 연혁이 15년이 됩니다. 60년대 초엽 당시에 朱源선생(현재 경제과학 심의회의 위원)께서 계획은 역시 종합과학으로 토목 건축 경제 행정 여러분야에서 국토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을 모아서 창립을 했어요.

도시계획면에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전쟁이 진행중인 동안 전후의 복구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들면 유명한 아반크론비의 그레이트 런던 프랜 같은 것도 1943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2차대전이 끝나기 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빈약했고 학문적으로 계획분야에 관심있는 분이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책결정자에게 알려줄 기회가 없어 한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부분적으로 있었다면 전주 대전 같은 경우는 일부 도시계획이 적용되었다고 하지만 정부에 정책결정자들의 전재복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외국의 원조기관을 통해 초토가된 땅위에 주택건설과 구호사업에만 치중되었지 도시의 장래 발전을 위한 계획같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시계획법」을 놓고 보면 1930년대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쭉 서왔어요. 그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계획이 아니고 건축규제와 도로노획 확보에 지나지 않았다. 대한 민국이 수립되고



〈국토계획학회 노용희회장과의 인터뷰〉

부터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될때까지 그것도 전근대적인 일본법을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나라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알지 못했느냐하는 단적인 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60년대초 5.16이후 도시계획법이 우리의 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일제시대의 법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제정. 도시계획뿐아니라 국토의 계획적인 토지이용관리를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법으로 제정된 것이 어느면으로 보면 현실보다는 이념이 앞선 것이기 때문에 국토건설종합계획 같은 것은 70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 되었는데, 계획은 생겼지만 최근 신문을 통해 보는바와같이 권역계획도 수도권이면 수도권으로 8중권계획이 다 끌이 난 것이 아니고 현재상태로는 최근

에 강원도와 경인지방에서 한것처럼 특정시설을 위해 특정지역 지정만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아직도 국토건설 종합계획은 실시가 그렇게 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와서 작금 2~3년내에 우리나라에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토지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농지, 상대농지, 농토의 이용보존에 관한 법률,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이 63가지나 됩니다. 그만큼 계획적인 접근을 할려고 하는 노력은 전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74년에 회장직을 맡아 이번총회에서 다시 중임이 되어 3년째인 회장직에서 제가 할 일은 그동안 정책결정자들도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에 관심이 달라졌고 학교의 교육분야에서도 대학과 대학원에 도시계획학과가 생겨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만해도 도시계획 석사가 150명정도 나오게 되었고 동아대학 한양대학 홍익대학에서 또 학사가 많이 나왔고 시립산업대학이 내년부터 학사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학회는 정치, 경제, 행정, 토목, 건축, 이와같은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시계획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특색이 있는데 내가 회장을 맞고 난 후에는 우리가 키워낸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고 나온 새로운 사람들을 회원으로 흡수하고 내임기까지에는 종전에 해오든 학회의 역활이 새로운 것으로 변천해가는 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생각입니다.

■ 76年度 學會의 事業計劃은

제가 회장이 되고난 후에는 學術用役은 하지 않는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用役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學會가 政府일을 맞나보면 利益이 相衝되는 점을 고려하여 用役을 하지 않는 대신 用役業體와 用役을 발주하는 地方自治團體를 團體會員으로 끌어들여 1년에 30통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代價로 用役業體나 地方自治團體에 技術諮詢을 해주고 資料일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實務者短期訓練」

금년에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地方自治團體에

내려가면 工業高等學校에서 土木科나 建築科를 나온 사람이 상하수도의 관리를 하다가 都市計劃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實務者들의 技術不足에서 오는 問題點을 短時日內에 고쳐서 職務을 충실히 遂行시키기 위하여 1주일내지 2주일의 단기 훈련으로 計劃의 實務를 가르쳐 주겠다하는 의도로 새로 마련했습니다.

「地域開發을 爲한 세미나」

금년에는 春川에서 태백군의 개발방향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하는 것을 全國의 學者들이 모여 論議할 수 있도록 學會가 주동이 될 것입니다.

「學術研究發表」

보통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計劃分野에서 外國에 나가 공부하고 學位를 取得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을 2名정도로 學術發表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의 施設基準 發刊」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一部마치고 19個가 남아 있는데 금년에 마치면 實務者短期講座와 冊으로 되어있는 「施設基準書」를 배부하여 計劃의 實務者를 學會가 도웁니다는 것입니다.

全國都市計劃 有關學科 優秀卒業生 施賞과 體育大會 시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 體育大會施賞은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學會誌는 1년에 2번 내고 있지요. 昨年에 教授 재임명제도라 해서 世上이 떠들썩 했지만 教授들의 研究熱을 높게하고 있는 것이 原因이 되어 참여하는 热誠度가 대단히 강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回數를 늘리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會員들은 어떤分野에서 일하는지

發足當時의 會員은 150名 정도 였습니다. 元老級과 中堅級會員까지는 대개 2~3學會에 가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 公職을 떠난 분들은 원래自己專門分野로 돌아갔고 나이가 많으시 분들은 돌아가셨고(死亡) 現在 경리하여 200명정도 되는데 매년 서울大 環境大學院에서 穩士學位를 받는 사람이 30~40名이 되고 5個大學에서 學士學位를 받는 사람중에 이分野에 종사할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會員의 교체나 확보는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實務에 종사하는 會員은 建設部가 많고 內務部 산하 都市計劃分野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教授들은 都市計劃과 國土計劃에 종사하시고 要 사이 범위가 좀 넓어져 環境計劃에 종사하시는 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 國際會議와 世界機構에서 學會의 위치와 역할은 어떤지요.

學會가 1972年에 제 4 차 EAROPH大會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는데 EAROPH團體가 무엇이냐하면 먼저 國際機構에 IFHP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using and Planning)가 어요 國際住宅都市計劃聯合會죠 이 IFHP에 동일부의 지부처럼 되어 있는 것이 EAROPH (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lanning and Housing)이예요 이 EAROPH 제 4 차 서울대회를 워커힐에서 열었고 團體會員일 뿐 아니라 朱源 전회장님이 거기에 명예회장이고 저 자신이 그곳에 부회장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깊숙한 관여가 되어 있죠 금년 회의는 日本 고베에서 개최됩니다. “고베” “효고” 현에서 IFHP와 EAROPH가 합하여 5월 18일부터 5일동안 개최하는데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가까운 日本에서 하기 때문에 6~7명의 代表를 參席시키고 또 하나 우리하고 관련 있는 國際會議가 HABITAT인데 “카나다 벤쿠버”에서 5月 31일부터 열립니다. 이 벤쿠버會議는 UN의 이름 밑에 카나다政府가 돈을 내어 개최하는데 人間定住에 關한 세미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代表를 참가하도록 科學技術處를 通해서 UNEP國際聯合에 環境計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여비신청을 내고 있으니까 아마 몇 사람 가게 될 것 입니다. 이렇게 國際會議에 참여를 해서 국제정보교환을 한다고 하는 것이 本學會의 基本事業의一部이기도 한 것입니다.

■ 都市計劃에 對한 會長님의 意見은 어떨습니까?

계획은 이런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계획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질 않으니까 무

엇인가 고쳐야 되겠다. 또는 현재는 만족스러워도 앞으로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계획의 필요성이 첫째 하나 생기는 것이고, 사람이 나거나 국가나 사회가 세월을 보내면서 앞으로 걸어나갈 때 속명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결정적으로 꼭 그길로 밖에 못 간다면 계획이 필요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2가지 조건이 합쳐질 때 계획적으로 앞으로 살아보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깐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 올리는 것이 정책변수고 그것을 나타낸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조시대에도 여러 가지 건축물 규제라는가 가로망 설정을 통하여 계획이 많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광화문의 폭넓은 길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대원군시대에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면 키조그만 양반이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도 이조때 많이 했잔아요. 배칸넘는 집을 지을 수 없다든지 담높이가 궁성 담보다 높아서는 않된다든지 그런 규제를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하천이 아니고 인공하천이다. 그런 것을 보아도 우리나라도 계획이 있었지만 외국의 도시계획은 물론 그 전부터 있었고 계획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적입니다. 그건 단순히 양상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달라져가고 있느냐 하면은 한세대 전만해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도로의 노폭을 어느 정도 정하고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걸 규제하는데 그쳤지만은 도시라고 하는게 도로 전물 공원과 같은 요련 물리적인 여건만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가 아니예요. 그속에 사람이 살고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움직이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물체로서의 도시는 물리적 시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인 요인 이러한 것들을 다 보아야 합니다. 종래 우리가 학문을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나누었을 때는 토목 건축은 자연과학 쪽이요. 도시행정이다 도시경제다 하는 것은 사회과학쪽으로 나누었지만 그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들여다보

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학회의 성질이 아까말했듯 종합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도시계획도 대단히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50년대의 이러한 경희은 경제계획부터 먼저 생겼어요. 50년대 말엽에 그것이 5.16후에 5개년 계획으로 발전이 되었을니다만 그때신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은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했고 일제 때의 도로 건축규제를 주로하는 시작이 된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려다가 60년대에 계획이 붐이 나니까 계획이 아무리 홀륭해도 실제적인 구체화가 되기에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때 돈은 없으면서도 의욕만 앞서 가지고 집행이 뒤 따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paper plan이라고 하자면 도면상, 지상에만 있는 그런 계획이 허다한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더 재정적으로 빈약한 현실을 이상에 가깝도록 그 범위내에서 풀어가느냐 앞으로 영업만에서 석유가 나오고 부유해지면 멋있는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재정도 거기에 마출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게 될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계획은 있으되 계획의 집행이 제대로 뒤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하는게 하나의 사람의 자유권에 규제요건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 갔다하면은 또 공원용지로 책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사유권에 침해가 많이 된것이 아니예요. 그 사람은 그 용도 이외에 쓰지 못하니깐 땅값도 많이 떨어지고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원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획선의 보상비를 주고난 후에 도로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왜냐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버카시프레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계획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무산층을 위한 대변역 활을 하는 계획가라고 하는 새로운 학파가 나와야 할 그런 영향도 있죠. 현실에 알맞추어 이상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가능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하도록 학회는 이를 주어야 합니다.

■ 최근 집필하고 계시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즉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시 도의 개발계획이라든지는 학회가 하지 않아도 다른 용역회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학회에서 해야될 일은 무엇이냐 좀더 학문적으로 경제적인 타산이 맞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것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해야됩니다. 해서 “도시계획사”를 하나 편찬하고 “도시문제에 관한 해설서”를 하나내자 이랬는데 자금이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 내자면 전회원들이 무료봉사를 해준다해도 인쇄비라든지 기타제반비용이 주백만원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학회를 도울는 어떠한 장학기금이라든지, 학회지 만드는데 20만원으로 그치지 말고, 좀더 특수사업의 경우에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보조금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아이디어는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응할 여유들은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만한 돈이 없다 이거에요. 이사회에서도 도시계획사와 도시문제에 관한 해설서 집필에 관한 것은 결정했지만 자금이 되는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都市計劃學을 전공하시게 된 動機는

전 원래 行政學을 했어요. 처음엔 地方行政, 그다음엔 都市行政을 하다보니 都市計劃을 전공하게 되었지요. 좀더 구체적인 動機로는 1968年 서울大 行政大學院에서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를 만들게 되었을 때 과주임이 되 이分野에 계시는 분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서 부터이지요.

■ 재미 있었던 追憶은

학교에 새로운 學科를 만든다는 것은 教授要員의 확보가 큰 문제이지요. 都市計劃學科를 만들면 5個年計劃으로 이 學科를 만들려고 했는데 67年 淳源先生께 의논을 했더니 現在 都市計劃專門家가 없는 것이 유감이라시면서 당장 만들라 해서 68年부터 學生을 뽑았지요. 뽑아놓고 보니 都市計劃碩士學位가 없으니 教育法施行令도 고쳐야하고 教授要員이 없으니 外援機關에 나와 있는 外國人們이 가르치고 그것을 옆에서 통

역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卒業하루전날 시행령이 고쳐져 都市計劃學碩士學位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되었지요. 그땐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 후배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國土計劃, 都市計劃을 전공한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職業으로 形成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時間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씩 個別的인 主張을 하지 말고 이 分野의 professional理念을 확립시켜一生 자기직업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뭉쳐서 우리의 뜻을 여러사람에게 알려주는努力을 하자는 것이 나의 意見이며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와 계획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회장님의 의견은

계획으로 보면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종합계획을 8중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수도권계획은 이 8중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도권 계획도 사실은 국토계획적으로는 않되어 있고, 경인지구 특정지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서 떠들고 있는 것은 수도의 인구집중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냥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으로는 서울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목표년도인 81년에 서울시 인구가 6백 30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백 80만이니까 계획이 초과된 것이라고. 초과되었다는 것이 계획이 죽어있다고는 볼수 없어요. 고로 81년까지 목표인구에 도달하도록 분산책을 유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1964년부터 수도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곤란하다.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분산을 시키자라고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성공이 않되고 있지요. 않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이 낮은데서 높은데로 흐르기 마련이예요. 결과적으로 농촌소득이 낮기 때문에 농촌경제에서 파탄을 맞은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3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죠. 이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지역개발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서 사는것이 서울에 살면서 얻는것만큼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만 있다면 공해문제나 범죄의 부작용이 많은 서울에 오라고해도 오지않읍니다. 그런의미에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양하기 위해서도 지역개발이란 굉장히 아쉬운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지역개발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과감한 집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전에 건설부가 확정고시를 내린 영남에 대한 특정지역계획 같은 것도 지방에, 그러한 투자를 하게되면 취업기회가 많이 마련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므로서 서울에 무작정 올라오는 경우가 적어지겠지요. 그럼으로 긴 안목을 놓고 볼때는 지역개발이 수도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가장큰 방법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까 지역개발금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때에는 응차를 해주는 기관이 있어야죠.

어차피 농업인구라고 하는 것은 영농기술이 향상되고 현재의 영세농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구가 빠져나와야해요. 그럼 그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과거 선진국의 경우는 해외 식민지로 보냈는데 우리는 식민지가 없으니까 도시로 모이게 되죠. 이것을 서울로 너무 많이 모여서 서울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중도시 정도에 권역중심도시를 중심적으로 투자개발하여 취업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살기 좋은 도록 하여 밀려나온 사람을 일단 그자리에 머무르도록 하여 주어야 될거예요. 그게 없이 나가리라고 한다면 전시상태에서 쓸수 있는 비상수단 이외의 것으로는 곤란 하다는 것입니다.

■ 계획이라고 하면 자연의 파괴를 의미하는데 자연보호와 계획의 균형에 대하여 한 말씀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3한강교를 건너 올려면 고속버스가 한 10대씩 줄서 있는 것을 보지요. 이것은 겹문겹색을 하는 경찰관이나 현병이 한두사람이기 때문이죠. 승객은 급한 일 때문에 고속버스를 타는데 천안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달려오는 시간보다

겸문겸색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걸다. 이거예요 이예를 놓고보면 간첩이 침투해 올려는지도 모르고 지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해 올른지도 모른다 하는 안보내지 치안유지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철저하게 이걸 해야죠. 승객의 입장으로 볼때는 급한 용무로 값비싼 고속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빨리 보내 주어야 된다라는 상충되는 2가지 이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경우에 만약 그것이 필요한 경우는 임겸 경찰관의 수를 늘려서 단시간내에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인원도 없고 돈도 없으니 늘릴 수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니까 몇시간을 기다리드라도 너희해라하는 발상이 있어서는 않되겠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개발이라고 하는 역사는 자연생태계의 어느 사이를 하나를 파괴시킨거나 파괴시키면서 서서히 보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지요. 생태학자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야되고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밑에 파괴해서는 않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자연파괴의 부산물인 공해문제가 있다하드라도 빙곤이 공해를 앞순다 이거예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개발을 해야되고 개발을 안하고 생태학자들 주장보양 끊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맑은 하늘만 쳐다보고 좋다고 할수는 없다. 이거지요. 그럼 개발이 하긴 해야 되는데 어데서 trade off 되어야 할 것인가 선진국의 생활철학 위주로 자원은 무한한 것이다. 그리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선이다하는 사고방식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요사이에 와서 고갈되는 자원에 위협을 받고있으며 자연에 보복을 받고 있으니까 당황해 가지고 인구도 0으

로 줄여라 경제성장도 0으로 하자 그러나 그네들이 내세우는 당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역사의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네들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의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우리가 받아 들여서 현재 trade off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현재 빙곤을 극복한다고 무조건 환경생태계를 생각하지않는 개발만 한 나머지 일정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되돌이킬 수 없거나 있더라도 비용이 많이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해서는 않됩니다. 그것은 선진국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이되죠. 개발이 늦더라도 조금은 보완하는 식의 환경문제를 배려하는 계획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Environment plan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 결정자들의 decision에 달려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해오면서 천상 중화학공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중화학공업이란 화성물질인 석탄이나 기름같은 화성연료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파괴가 되기 마련인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한도까지 규제하여야 합니다. 환경규제를 하다보면 외국자본이 안들어 오니까 환경문제는 3천팔라 소 득이 올라가고난 후에 하자 이래가지고는 않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화를 피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어야 하고 환경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까지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해서 정부가 행정을 속결주의로 나가다보면 시간이 걸리는 연구가 무시될 수 있고, 무시하다보면 되돌이 칠 수 없는 사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할 시점에 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有備無患精神으로 民防衛隊列에 앞장서서
모든 事態에 處理해 나갑시다.